

공익
인권법
재단
공감

연간보고서



공감 소개

사진으로 보는 2016년 공감

04

08

공감 마당

인권법캠프 _08

월례포럼 _10

자원활동 _12

청소년 인권 강좌 _14

16

2016 공감의 활동

여성인권 _18

장애인권 _21

이주·난민 _25

빈곤·복지 _28

국제인권 _32

취약노동 _36

공익법 일반 _40

공익법 교육·중개 _45

공감이 걸어온 길

48

50

공감 살림살이

52

참 고맙습니다

56

함께하는 사람들
- 이사회

54

함께하는 사람들
- 구성원

후원 및 기부금영수증 안내

공감

소수자의 입장에 서서

인권

구체적 삶의 현장의 목소리에 응답하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共感)은

2004년, 국내 최초의 전업적, 비영리 공익변호사단체로 출발했습니다.

지난 13년간 공감은 장애인, 폭력 피해 여성, 이주민과 난민, 아동, 홈리스, 성소수자,

청소노동자, 아파트 경비원과 같은 우리 사회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편에서 활동해 왔습니다.

수임료 걱정 없이 찾아올 수 있는 친구 같은, 만만한 변호사가 되기를 희망했습니다.

희망을 그리는 길, 변화와 인권의 가치를 지향하는 공감이 함께 하였습니다.

법

법으로 사회 변화를 일구고자 합니다

共感

人權

法

01



01 정신장애인공동체 일본 베델의집 방문

사진으로 보는 공감 2016년

02 인신매매 일본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쟁점 토론회

03 서울노동권익센터 업무협약

04 아파트 경비노동실태와 대안 모색 토론회 - 해고위협, 저임금 아파트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조건 이대로 좋은가

02



03



04



05 2016 공익입법아카데미

- 06 서울대학교 인권포럼 - 세월호, 진실과 기억
- 07 정신장애인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법제포럼
- 08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4월 부산
- 09 성소수자혐오반대의 날 기념



06



07



08



09



10 인권법학회 · 공감 공동집담회 - 이주민 기본권의 재구성
11 강남역 살인사건 관련 긴급 집담회 - 대한민국 정신장애인의 권의 현주소
12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협약식



16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_6월 서울
17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협약식
18 미추홀 외국어고등학교 인권 동아리 방문



13 기업과 인권, 난민 라운드테이블
14 2016 난민의날 행사
15 토론회 - 이주노동의 진단과 향후 도약을 위한 모색



19 이주여성 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조사 결과 보고회
20 2016 해외한국기업 인권실태조사 발표회



인권법캠프

공감은 매년 여름과 겨울, 예비 법조인을 대상으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인권법 캠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2월에는 45명이, 7월에는 78명이 참석하여
 함께 강연을 듣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었습니다.
 가까운 미래, 법조인을 꿈꾸는 이들에게
 공감 인권법 캠프가 작은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공감
 마당

소통과 참여





공감
마당

소통과 참여

월레포럼

시민을 대상으로 열리는 공감 월레포럼은 다양한 인권문제와 고민이 담긴 자리입니다.

공감 자원활동가들이 주축이 되어 기획하는 공감 월레포럼은 2016년에는

23기, 24기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준비했습니다.

알바, 조교, 근로장학생 만국 청(소)년들의 진짜 노동이야기 - 우리는 착취를 반대합니다!

_ 이음(청소년 노동자), 나단(근로장학생 해고자), 이바름(대학생 조교), 정준영(청년유니온 정책국장) / 2016. 04

정신장애인, 몰랐거나 모른척했던 이야기들 - 편견 너머의 이야기

_ 김락우(한국정신장애인지원생활센터 대표), 문용훈(태화생숲는집 관장) / 2016. 06

원전, 그것이 알고싶다 원전... 그런데 말입니다

_ 김익중(동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양이원영(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2016. 07

차벽과 물대포를 넘어서

_ 박주민(더불어 민주당 국회의원) / 2016. 10

위험死회 - 나, 너, 우리, 위험사회에 버려지다

_ 안종주(서울대 보건학 박사) / 2016. 11





공감 23기 자원활동가
 강지애 곽경민 김채영
 박예녹 박인영 박지성
 백정현 신소현 양지우
 염은비 이세영 이종국
 임익호 허자인

공감 24기 자원활동가
 김민주 김수완 김지영
 도영원 박지아 안미혜
 임서정 장솔빛 정순문
 주선민 홍혜린



자원활동

공감은 매년 상반기·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자원활동가를 모집해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법률 문헌 리서치와 홍보, 운영으로 선발된 자원활동가들은
 구성원들과 함께 각자의 영역에서 공감의 활동을 채워 갑니다.
 5개월이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자원활동가들이 나눠준
 땀과 열정으로 공감은 더 힘차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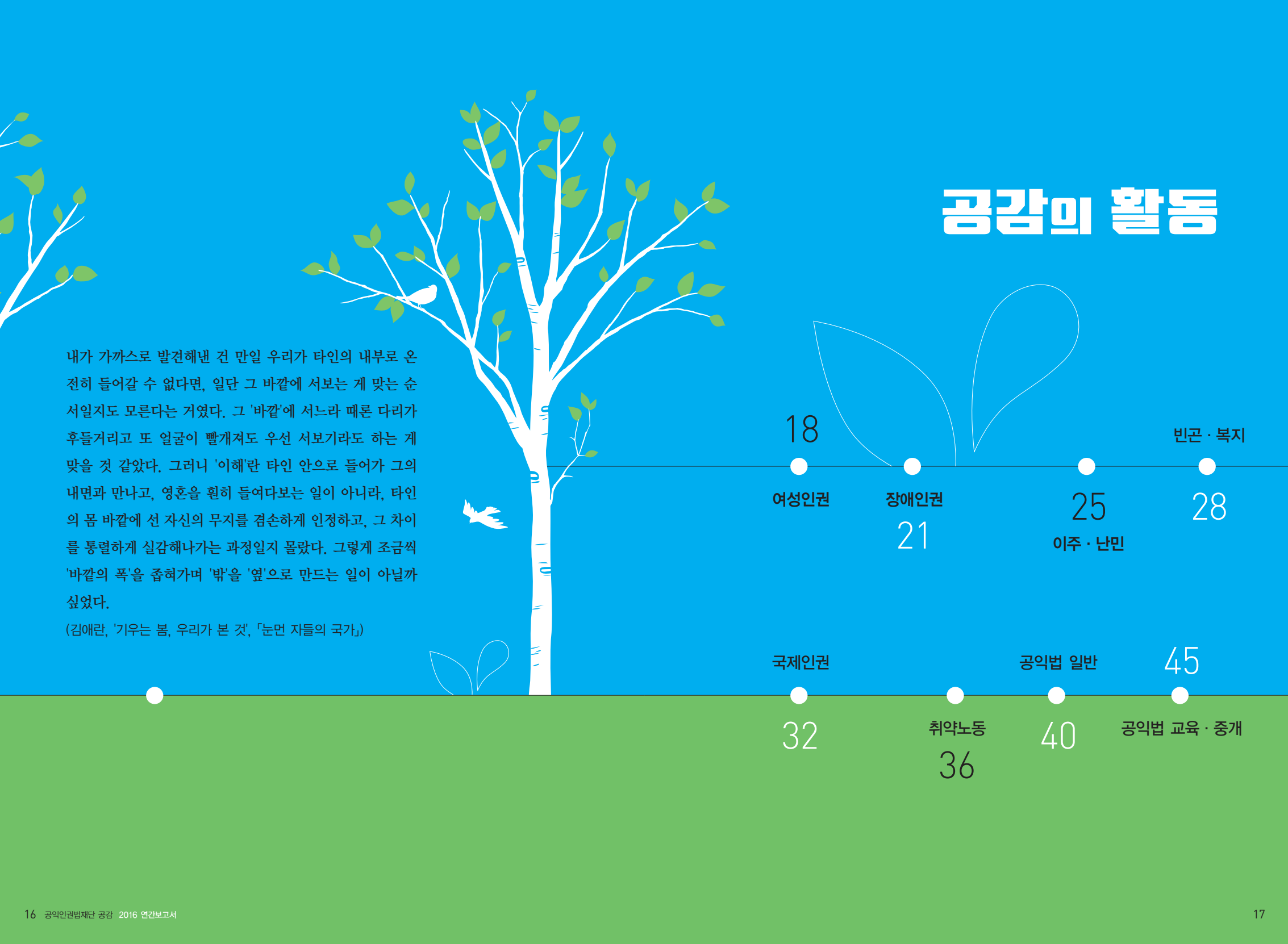
공감
마당
—
소통과 참여



청소년 인권 강좌

공감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들을 만납니다.

공익변호사가 장래 희망이라면서 구체적인 질문을 쏟아내는 청소년들의 진지한 눈빛과 순수한 열정은 공감 변호사들을 긴장시키고 자극합니다. 한편으로는 청소년들이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들을 수 있는 자리여서 뜻깊습니다. 미래의 공익변호사를 만나는 일은 언제나 공감에게도 마음 설레는 일입니다.



공감의 활동

내가 가까스로 발견해낸 건 만일 우리가 타인의 내부로 온전히 들어갈 수 없다면, 일단 그 바깥에 서보는 게 맞는 순서일지도 모른다는 거였다. 그 '바깥'에 서느라 때론 다리가 후들거리고 또 얼굴이 빨개져도 우선 서보기라도 하는 게 맞을 것 같았다. 그러니 '이해'란 타인 안으로 들어가 그의 내면과 만나고, 영혼을 훤히 들여다보는 일이 아니라, 타인의 몸 바깥에 선 자신의 무지를 겸손하게 인정하고, 그 차이를 통렬하게 실감해나가는 과정일지 몰랐다. 그렇게 조금씩 '바깥의 폭'을 좁혀가며 '밖'을 '옆'으로 만드는 일이 아닐까 싶었다.

(김애란, '기우는 봄, 우리가 본 것', 「눈먼 자들의 국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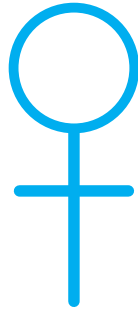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성폭력 실태 조사

19

필리핀 여성의 상습 강제추행 피해 대리

20



공감의
활동

여성인권

“차에서 내려서 집과 어떤 곳에서 일을 하는지 보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옆에 다른 컨테이너는 있는데 사람이 없어요. (중략) 밤에 너무 무서워요. 그쪽에는 낮에도 조용하니까 너무 무서워요”

“가끔 우리가 목욕하고 있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욕실에 와서 문을 열었어요. 그때는 우리가 너무 깜짝 놀라고 너무 무서웠어요.”

공감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함께 200여명의 베트남과 캄보디아 출신 이주여성 농업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80.6%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에서 지낸다고 답변했습니다. 숙소는 대부분 농장 안의 외딴 곳에 위치하고, 위생과 안전 상태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농산물 재배 분야의 경우 67% 이상이 컨테이너 박스나 비닐하우스와 같은 가건물에서 지내고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고용주 등이 마음대로 숙소에 드나든다고 답변한 사람이 35.7%, 욕실에 잠금장치가 없다는 답변이 26.5%, 침실에 잠금장치가 없다는 답변이 26.5%를 차지했습니다. 이주여성은 일상적인 성적 위협과 두려움에 취약하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설문 응답자 중 12.4%가 성폭력 피해를 경험했다고 답변했습니다. 성폭력 피해 경험은 여러 종류의 피해가 동시에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피해를 경험한 이주여성 대부분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습니다. 조사에 응한 이주여성 대부분이 열악한 주거·노동 환경 속에서 일상적으로 신체적, 성적 위협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고용주가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는 숙소에 대해 어떠한 공적 개입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2017년 공감은 이주민의 주거권 개선을 위한 활동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주여성 농업노동자의 노동 환경과 성폭력 실태 조사

2016/03 설문 설계 및 예비 조사

2016/04 1차 자문위원회 회의

2016/05 조사원 교육

2016/05~09 설문조사 및 심층 면접 진행

2016/10 2차 자문위원회 회의

2016/12 결과보고 국회 토론회

필리핀 여성은 가수로 일하는 줄 알고 한국에 왔습니다. 초청 기획사는 필리핀 여성을 의정부 지역의 외국인전용유흥업소로 보냈습니다. 업주는 필리핀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강요했고 상습적인 강제추행을 일삼았습니다. 업소를 탈출하면 업주의 신고로 ‘불법’ 체류자로 전락할 것이 두려워 여성들은 떠나지 못했습니다. 단속에 나선 출입국관리공무원들은 오히려 필리핀 여성들을 검거해서 외국인보호소에 수용하고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습니다. 체류를 허가해 준 ‘가수’로서의 일 이외에 ‘성매매’에 가담했으므로 출입국관리법과 성매매특별법을 동시에 위반했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본인들의 의사에 반해 이루어진 일들이었다는 점은 출입국 행정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공감은 공익법센터 어필과 공동으로 필리핀 여성들에게 법률지원을 진행했습니다. 우선 강제퇴거명령이 집행되지 않도록 집행정지 신청을 해 승소했습니다. 여성들은 외국인보호소에서 나와 쉼터에서 지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업주와 기획사를 상대로 ‘성착취 목적의 인신매매’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필리핀 여성들을 수시로 끌어안고, 가슴을 만지는 등 추행을 일삼은 업주를 상대로 상습강제추행으로 고소 대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업주에게 상습 강제추행이 인정되어 징역 8월이 선고되었고 강제퇴거명령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조정권고가 나왔습니다. 2년여간 진행한 소송은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 남은 절차에서도 필리핀 여성들을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필리핀 여성의 상습 강제추행 피해 대리

2015/05 강제퇴거 및 보호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서 제출 및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제기

2015/06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

2015/06 상습강제추행 고소장 제출

2015/10 필리핀 여성에 대한 검찰의 참고인 조사 동행

2016/06 필리핀 여성에 대한 법원의 중언 조사에 대한 동행

2016/12 상습강제추행죄로 업주에 대해 징역 8월 선고(1심)

2017/02 강제퇴거명령처분 및 보호명령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조정 권고



22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결정

23

지적장애 청소년 위법수사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

24

정신보건법 전면개정

국민의
힘을
활용

장애인권

ON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6년 9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1인의 진단이 있으면 보호입원이 가능하도록 한 정신보건법 제24조 제1항, 제2항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하였습니다. 공감은 이와 관련하여 공동변호인단으로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에 참여하는 등 다양한 변론활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중립적인 제3자의 판단도 없이 보호의무자 2인의 동의와 정신과 전문의 1인의 판단만으로 사실상 강제 구금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제도 악용 가능성이 있음에도 정신 질환자의 신체의 자유 침해해 최소화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는 점은 헌법상의 신체의 자유·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현재의 불합치 판결에 따라 국회는 강제입원시 정신장애인 본인을 위한 중립적인 사법기관의 심사를 받고, 그 과정에서 변호인 또는 절차보조인의 도움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입법을 통과시킬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현행과 같은 황당한 강제입원은 조만간 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정신병원 강제입원 헌법불합치 결정

2016/01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자 국가배상청구소송

2016/01 일본 홋카이도 정신장애인 공동체 베델의집 방문

2016/03 정신병원 강제입원 피해자 형사고소 대리

2016/04~05 정신보건시설 인권강사 양성과정 인권교육

2016/05 재단법인 동천 장애인법총서 '정신적 장애인의 자기결정권' 논문 공동집필

2016/09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자 대상 인권교육

2016/10 일본 오사카 지역 정신장애인 관련기관 방문

2016/07~12 보건복지부 정신장애인차별개선 TF 위원 활동

지난 2013년 8월 새벽 서울 모 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지적장애가 있는 김모 군(당시 만 18세, 지적장애 2급)과 이모 군(당시 만 17세, 지적장애 3급)을 특수절도 혐의로 수사하면서 피의자가 지적장애인이자 청소년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자 동석을 거부하고, 폭행 및 폭언을 하는 등 강압수사를 벌여 심리적으로 위축되게 한 상태에서 허위자백을 받아내었고, 이를 근거로 검찰은 이들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여 기소유에 처분을 하였습니다. 공감은 2016년 5월 지적장애 청소년에 대해 위법한 수사를 진행하여 유죄인정을 한 수사기관을 상대로 국가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항소심까지 다룬 끝에 지난 2016년 0월 최종승소판결을 받아냈습니다.

이번 판결을 통해 경찰관들이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밤샘수사와 폭행 등의 강압수사를 하고 강요에 의한 자백을 근거로 사건을 조작하는 등 수사절차상 지켜져야 할 인권원칙을 위반하여 지적장애인의 인권을 현저히 침해하는 위법한 수사에 경종을 울렸습니다. 앞으로 인권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찰의 수사 관행은 근절되어야 할 것이고, 지적장애 청소년과 같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수사절차상 권리가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지적장애 청소년 위법수사 국가배상청구소송 승소

2016/01~12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공익이사 활동

2016/01~12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기 사례회의 자문

2016/01~12 경북 상주 영구임대아파트 주차장 접근권 차별 구제소송 항소심

2016/01~12 염전노예 국가배상청구소송

2016/02 인강재단 시설폐쇄처분 취소소송 피고 대리 (1심 계속)

2016/05 지적장애인 위법수사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소송

2016/08 시각장애인 지하철 추락사고 손해배상청구소송 합의종결

2016/08 자립재단 임원해임명령 취소소송 피고 대리

2016/09 청각장애인 형제 재산권 침해 형사고소사건 대리

2016/10 장애인법연구회 주최 국제컨퍼런스 발제 '장애인의 법적능력과 법 앞의 평등'

2016/12 장애인거주시설 시각장애인 생활자 사망사건 형사고소사건 상고심 피해자 대리

2016/12 법원 판사·직원 대상 장애인식개선교육

2016년 1월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 공동행동이 결성되었고, 공감도 공동행동에 주도로 참여하여 2016년 7월 국회 김춘진 의원실을 통해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국회에서는 2016년 하반기에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안 및 복지부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에 관해 연달아 공청회를 개최하였고, 공감의 변호사도 공청회에 나가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공동행동의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안 및 복지부의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을 통합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였고, 이러한 통합법안이 결국 2016년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사인들 간에 재산권 탈취·사적 감금의 수단으로 악용되어왔던 정신보건법상 강제입원제도를 대폭 강화하였고,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병원에서 퇴원하여 지역사회에 복귀하는 데에 있어서 필요한 고용·직업재활지원, 평생교육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등의 복지조치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모쪼록 이번 정신보건법 전면개정을 시작으로 하여 정신장애인들이 정신병원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정신보건법 전면개정

2016/01~12 정신장애인복지지원법 제정 공동행동 활동

2016/04~12 정신장애인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해외사례 연구 공동참여

2016/05~12 서울시 정신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제도화방안 연구 공동참여

2016/05 정신보건복지학회 '정신장애인 복지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 평가' 발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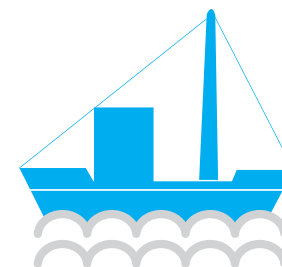
2016/06 발달장애인 전담경찰관 대상 인권교육

2016/06 강남역 살인사건 긴급집담회 및 토론회 등 발제·토론

2016/09~12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자문위원 활동

26

돌아갈 곳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변론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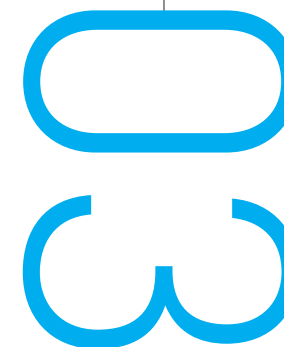


이주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이주노동운동의 길을 묻다

27

이주민의
기본권

이주·난민



국적이 없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전 세계 195여 개 국가 중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은 사람의 삶은 어떤 모습일까요? 국적이 없는 사람이 봉착하는 첫 번째 어려움은 여권 등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으로 신분을 증명해 줄 국가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적은 권리를 위한 권리라고 이야기 합니다.

국적의 박탈은 공식적 생활영역에서의 사형선고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출신국에서의 박해를 피해 망명한 난민은 국적이 있다 하더라도 자국의 보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무국적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습니다.

3~4%대의 난민인정률이 말해주듯 한국에서 난민으로 인정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 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한국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가입국으로서 난민 해당여부를 심사하는 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의 가입국이기도 한 한국은 무국적자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어떠한 제도도 마련하고 있지 않아 무국적자들을 사각지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지난 한 해 동안에도 돌아갈 곳이 없는 난민과 무국적자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소송 및 법률지원을 하였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활동을 이어가겠습니다.

돌아갈 곳 없는 사람들의 권리를 변론하다

A국 출신 난민신청자(T) 소송대리

U국 출신 난민신청자(I) 소송대리

U국 출신 난민신청자(B) 소송대리

P국 출신 난민신청자(F) 소송대리

P국 출신 난민신청자(A) 소송대리

S국 출신 난민신청자(B) 난민신청 법률지원

S국 출신 난민신청자(M) 난민신청 법률지원

T국 출신 무국적자(K) 법률지원

B국 출신 무국적자(S) 소송대리 및 보호일시해제신청 등 법률지원

그동안 공감은 이주 영역(이주노동자, 이주여성, 난민, 이주아동 등)에서 폭 넓고 다양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개별 활동을 하면서 한계를 많이 느꼈고, 보다 근본적인 지점에서부터 다시금 짚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공감 안에 이주팀을 꾸리고 기획 토론회를 준비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내부 세미나를 진행하고 각 영역별 토론회를 준비한 끝에 이주민의 기본권과 이주노동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주민의 기본권에 관해서는 “이주민 기본권의 재구성”이라는 주제로 2016. 5. 19. 집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연구자, 실무자, 인권활동가 등이 참가하여 이주민을 사회권적 기본권의 주체에서 배제하는 것은 정당한가, 국가배상 등 법제에 규정된 상호주의는 어떻게 평가되어야 하는가, 출입국통제가 기본권을 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현실은 문제가 없는가, 확산되고 있는 외국인혐오주의, 인종주의적 법제와 정책, 인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주노동에 관해서는 “이주노동운동의 현 단계 진단과 향후 도약을 위한 모색”이라는 주제로 2016. 6. 24.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주노동 관련 단체들 및 활동가들과 함께 4~5차례에 걸쳐 사전 세미나를 진행하면서 활동 및 소회를 공유하였고, 토론회를 통해 이주노동의 현 상황과 방향에 관해 허심탄회하게 논의하였습니다.

이주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이주노동운동의 길을 묻다

- 공감 이주 연속 토론회 개최

2016/03 이주노동 관련 단체 및 활동가들에게 세미나 기획안 제출

2016/04 ~ 06 '이주노동 운동의 진단과 도약을 위한 모색' 토론회 사전 세미나 4회 진행

2016/05/19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인권법학회 공동주최 '이주민 기본권의 재구성' 공동집담회 개최

2016/06/24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민주노총,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이주공동행동,

이주노조, 이주인권연대, 이주민센터 친구 공동주최

'이주노동운동의 현 단계 진단과 향후 도약을 위한 모색' 토론회 개최

5살이 되어서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 현우

29

30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 진상 조사 활동을 펼치다

복지사각지대의 주범인 부양의무자기준을 해부하다

31

공간의
활동을

빈곤·복지

5살 현우(가명)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병원에도 어린이집도 가지 못했습니다. 현우 아빠는 현우의 출생신고를 위해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미혼부여서 안된다, 친모의 인적 사항 일부를 알기 때문에 안된다, 친모에게 법률상 남편이 있어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구청과 법원은 현우의 출생사실을 인지했지만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았으며, 민원이 우려된다며 출생신고를 거부한 것입니다. 출생신고를 아동의 권리로서 생각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공감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아동인권위원회와 함께 친자관계존부확인의 소송 등 필요한 법적 대응을 했습니다. 승소한 결과 태어난지 5년이 지나서야 현우는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출생신고는 아동인권보장을 위한 플랫폼입니다. 출생신고가 되어야 비로소 아동은 건강보험, 보육료 지원, 의무교육 등 다양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에게 출생신고를 권리로 보장하고 있습니다(제7조). 나아가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우리나라 정부에게 ‘보편적 출생등록 제도’의 도입을 촉구해왔습니다. 공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아동은 학대 및 유기, 불법적인 입양, 아동매매의 위험에 취약하게 노출됩니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병원에도 갈 수도 없고 학교에도 가기 힘듭니다. 출생신고가 아동에게는 권리, 부모에게는 의무인 이유입니다. 공감은 출생신고되지 않은 내·외국인 아동을 위해 법률지원을 진행했고, 더불어 근본적인 제도개선을 위해 여러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출생신고 네트워크’를 결성하여 인식개선 캠페인, 대국회 활동을 펼쳤습니다.

5살이 되어서야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된 현우

2016/05~07 보편적 출생신고 캠페인-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신고’ 진행

2016/09 국회의원 백혜련 의원 주재로 출생신고 관련 부처 간담회 진행

2016/09 한국가족법학회 주최 컨퍼런스 ‘현행 출생신고제도의 문제점 및 제도개선 과제’ 발표

2016/10 국가인권위원회와 출생신고네트워크 공동 주최 ‘아동의 출생신고의 권리보장 방안 검토’ 토론회 발표

2016/11~12 출생신고 미신고 이주아동의 입양심판 청구-청구취지 변경 및 중국법 검토 의견 제출

2016/11 출생신고 미신고 5세 국내아동의 친자관계 존부확인의 소송 소장 접수

2017/02 출생신고 미신고 5세 국내 아동의 친자관계 존부확인의 소송 판결 선고-승소

2016년, 두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서 학대당하고 사망했습니다. 2016년 7월 말, ‘은비’는 대구 지역의 예비 입양 가정에 보내진 지 7개월 만에 병원 응급실에서 뇌사 판정을 받았습니다. 2016년 10월 초, 포천에서는 6살 입양된 딸을 학대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암매장 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두 사건은 현행 입양 절차가 아동인권을 보호하는데 얼마나 허술한지 드러냈습니다. 아동의 복리와 생명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입양 제도를 전면 재구성해야 합니다. 친부모가 아동을 포기할지 고민하는 시점부터 입양 상담, 아동의 인도까지 민간단체인 입양기관에게 일임해서는 안됩니다. 아동복지법상 공적인 아동 보호체계와 단절되어있는 것도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입양을 입양부모와 기관의 선의에만 맡겨두고 방치하는 것은 아이를 정성껏 돌보고 있는 입양부모들에게도 누를 끼치는 일입니다.

입양을 통해 아동이 사망하는 일이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공감은 국회의원과 아동인권단체, 연구자, 법률가 단체, 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를 발족했습니다. 두 입양아동이 학대·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의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고 구멍이 뚫린 지점을 찾아내어 아동 인권의 관점에서 입양 절차를 전면 개선하고자 합니다. 입양 제도가 아동인권의 관점에서 근본부터 철저히 재구성될 때까지 공감은 현장을 지키고 법적인 문제제기를 해나가겠습니다.

입양아동 학대·사망 사건 진상 조사 활동을 펼치다

- 2016/10 대구·포천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진상조사 및 제도개선위원회 발족
- 2016/11 입양아동 학대 근절 캠페인 진행
- 2016/12 대구지역 병원, 경찰,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지 조사 진행
- 2017/01 대구 입양 아동 관련 입양기관 현장 조사 진행
- 2017/02 대구 입양 아동 학대 치사 사건 1심 형사 재판 선고-양부에게 징역 10년 선고

최저생계비 미만의 소득으로 살아가면서도 공공부조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빈곤인구의 규모는 2010년 기준으로 400만 명이 넘습니다. 공공부조를 받는 인구(130~150만 명)보다 오히려 사각지대가 넓은 것인데, 지나치게 엄격한 재산기준과 더불어 주범으로 꼽히는 것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어야 한다”는 부양의무자기준입니다.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한 사각지대가 과연 부정수급 증가를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부수적 현상에 불과할까? 부양의무자기준을 고집하는 한 정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생존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를 위반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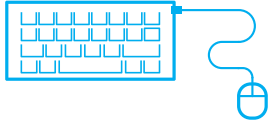
공감은 위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재단법인 동천, 화우 공익재단, 성균관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복지사회를 위한 변론’ 소속 변호사들과 로스쿨생들과 함께 정기적 연구모임을 가졌고, 2016. 6. 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이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공감,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재단법인 동천, 화우 공익재단, 성균관대 로스쿨 리걸클리닉 ‘복지사회를 위한 변론’ 공동주관, 남인순 의원 주최). 여러 교수, 학자, 시민단체 활동가, 변호사, 정책 연구기관 연구원 및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참여하여 열띤 발제와 토론을 이어간 이 토론회는 부양의무자기준의 위헌성을 부각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복지사각지대의 주범인 부양의무자기준을 해부하다

- 2015/08/06 ~ 2016/0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부양의무자기준 연구모임
- 2016/04/29 제9회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정기학술대회 발제 “기초생활보장과 부양의무”
- 2016/06 「한국사회보장법학」 ‘기초생활보장과 부양의무’ 게재
- 2016/06/14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의무자기준과 사회적 기본권의 보장” 국회토론회 개최



아시아 인권 옹호를 위하여 네트워크를 네트워킹하다



33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고 국민을 불신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

34

세계의 공장 중국, 기업인권의 최전선을 가다

35

공간의
이탈

국제인권

공감은 지난 10여 년간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HRBA2J-Asia), 아시아사법접근권컨소시엄(APRRN) 등 여러 아시아 인권NGO 네트워크의 결성 및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왔고 특히 일본, 대만의 난민법제 개선과 아시아 인권NGO들의 역량 강화에 기여해왔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국제회의의 단순 참가에서 더 나아가 아시아 네트워크의 조직화, 타국 혹은 아시아 지역 인권 옹호를 위한 구체적인 자문과 개입, 축적된 공익법조직 운영, 공익변론/입법운동의 경험과 지식의 확산 등의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시아사법접근권컨소시엄(HRBA2J-Asia)의 기업인권매뉴얼 집필, 출판을 자문, 주관했고, 4월 태국의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난민심사 워크숍에서는 유엔난민기구의 난민심사기준과 절차 가이드라인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 자문했습니다. 8월 인도네시아의 아시아 프로보노 회의에서는 공익법 중개조직의 성공 요인에 대한 워크숍의 진행과 자문의 역할을 수행했고, 11월 말레이시아의 아태지역 무국적 회의에 참가해서는 무국적 문제 등을 다루는 공익법조직의 운영과 활동방식에 대해 소개하고 자문했습니다. 공감은 앞으로 국제회의를 통한 자문과 경험 공유 외에도 구체적인 이슈에 대해 집중적인 자문/전략회의의 조직 등을 통해 아시아 인권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아시아 인권 옹호를 위하여 네트워크를 네트워킹하다

- 아시아사법접근권컨소시엄(HRBA2J-Asia),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등 활동

2016/04/25 ~ 04/26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APRRN) 난민심사 워크숍 참가 (태국 방콕)

2016/05/24 울산대 아시아공동론-아시아의 미래 '인권과 아시아공동체' 강의

2016/06/08 난민국제보호아시아네트워크(ANRIP) 기업인권과 난민 라운드테이블 참가

2016/07/08 ~ 07/10 메리디언180(Meridian180) 세계위기 심포지엄 이주민 인권과 이주의 미래 한국실무그룹 발표, 참가 (일본 오키나와)

2016/08/17 고대인권센터 아시아인권포럼 '아시아 인권운동의 현황과 과제 : 난민 인권과 아태난민권리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발표

2016/08/29 ~ 09/01 Asia Pro Bono Exchange 참가 (인도네시아 발리)

2016/10/17 베이징대 연친학당 '국제인권옹호활동' 특강 (중국 베이징)

2016/11/24 ~ 11/26 Conference on Addressing Statelessness in Asia and the Pacific 참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평화로운 집회와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유엔집회결사특보’)은 2016년 1월 20일부터 29일까지 한국을 공식 방문하여 정부, 지자체, 인권단체, 피해자 기타 관계자들을 방문, 면담하고 한국의 집회와 결사의 자유 관련 인권 상황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유엔집회결사특보는 이 방문조사를 기초로 6월 17일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한국방문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공감은 관련 NGO들과 함께 유엔집회결사특보의 한국방문 및 보고서 발표의 전 과정에서 한국의 인권상황이 객관적으로 파악·평가되고, 정부에 대한 구체적인 권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지난 10년간 국내 집회 중 집회 자체가 처음부터 폭력적인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집회를 막고 표현을 억압했을 때 집회를 지키고 의견을 펼치려는 이들과 공권력이 충돌했던 것입니다. 유엔은 이러한 집회에 대한 억압에 대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경고를 보냈고 유엔집회결사특보는 한국방문 보고서를 통해 이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법의 지배의 핵심 요소인 책임성과 투명성에 대한 요구를 정부 자체를 약화시키려는 시도와 동일시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집회와 시위...(는) 사회적 갈등의 척도이면서 이를 해소할 평화로운 수단이다. 이러한 표현 방식의 기회를 억압한다면 폭력적인 저항이라는 원치 않는 결과를 가져올 뿐 아니라 결국 대한민국이 이제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훼손하게 될 것이다.”

민주주의를 이해 못하고 국민을 불신하는 이들에 대한 경고

— 유엔집회결사특보 2016년 한국방문 및 보고서 발표 관련 활동

- 2016/01/12 유엔집회결사특보 방한 준비 기자간담회 발표
- 2016/01/20 ~ 01/29 유엔집회결사특보 한국 방문 조사
- 2016/01/29 유엔집회결사특보 기자회견 참가
- 2016/06/13 ~ 06/17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 참가 (스위스 제네바)
- 2016/02/14 유엔인권이사회 "집회 관리에 대한 실천적 권고의 국가여행" NGO행사 공동주최
- 2016/06/15 한상균, 백남기 유엔본부 앞 거리 캠페인
- 2016/06/17 유엔인권이사회 구두진술 작성, 발표(백민주화)
유엔인권이사회 집회결사특보 한국보고서 발표

공감은 공감이 속한 기업인권네트워크의 활동의 일환으로 희망법, 민주노총과 함께 2016년 10월 10일 부터 10월 21일까지의 일정으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인권 보장실태를 조사하였습니다. 10박 11일 동안 조사팀은 홍콩을 경유하여 선전, 후이저우, 광저우를 거쳐 베이징과 톈진을 방문하여 노조, 학계, 노동자지원단체, 법률가, 국제기구, 한국기업 관계자와 노동자들을 면담하였습니다.

중국 내에서 한국기업 혹은 그 협력업체들이 행하고 있는 노동권 등 인권의 침해는 한국 내의 양상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편법을 통해 불안정노동을 확산시키고 교육을 위해 찾아온 실습생들을 권리 없는 값싼 노동력으로 전락시키는 관행이 광범위하게 존재했습니다. 중국에 유일한 합법적 노동조합으로 인정되는 공회는 노동자들의 권리보다 당정책을 대변하는 일종의 관료조직입니다. 한국기업 혹은 그 협력업체들은 노동자의 단결권에 대해 진지하게 접근하기 보다는 형식적으로 공회를 인정하는 선에 그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산업안전, 보건, 사회보험 등과 관련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었고 여전히 야만도주하는 한국기업의 사례를 직접 볼 수 있었습니다. 공감은 관련 단체들과 함께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인권을 바라보는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와 일부 기업의 전횡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기업의 이익이나 국익에도 결코 부합될 수 없음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적절한 법제의 개선, 행정적인 조치, 관행의 시정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세계의 공장 중국, 기업인권의 최전선을 가다

— 중국 내 한국기업 인권 실태조사 및 보고

- 2016/07/14 ~ 10/05 중국 내 한국기업 인권 실태조사 문헌 조사연구 & 방문처 연락 등 준비
- 2016/10/10 ~ 10/20 중국 내 한국기업 인권 실태조사 (중국 홍콩, 광저우, 베이징, 톈진)
- 2016/10/10 ~ 10/12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자문회사, 국제인권단체, 노조연합, 노동단체, 외국연기금운영기관, 기업인권NGO 관계자, 학자 면담 (중국 홍콩)
- 2016/10/13 ~ 10/15 노동조합, 노동단체 관계자, 학자 면담 (중국 광저우)
- 2016/10/16 ~ 10/18 국제노동기구, 국제공익법단체, 기업인권NGO, 한인상회 관계자, 법률가, 학자 면담 (중국 베이징)
- 2016/10/19 한국기업, 협력업체 관계자, 노동자 면담 (중국 톈진)
- 2016/12/01 ~ 12/26 중국 내 한국기업 인권 실태조사 보고서 작성
- 2016/12/28 해외한국기업 인권실태조사 보고서 발표회

37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활동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

38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에 이의제기하다

39



공감의
활동

취약노동

구의역에서 스크린도어 수리 업무를 하던 노동자가 역사에 들어오는 전동차에 치어 사망했습니다. 경기도내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뷔페형 외식업체에서 일하던 한 노동자도 과로에 시달리다 자살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모두 스무 살, 이제 막 고등학교를 졸업한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한 청년은 음식을 배달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해 하바신이 마비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 청년이 노동자가 아니라며 산업재해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습니다.

어리다는 이유로, 경험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아직 학생이라는 이유로 청년들은 제대로 된 권리와 지위를 보장 받지 못한 채 착취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점점 더 일자리는 불안정해지고, 노동조건은 열악해지는 상황 속에서 청년 실업, 청년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그 어느 때보다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2016년 공감은 청년 노동자들을 위해 다양한 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원인을 진상조사하고, 자살한 노동자의 아버지를 도와 외식업체에 사과 및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배달대행 청년 노동자를 대리하여 항소심 및 상고심을 진행했습니다. 해결된 사안도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 활동

2016/01 ~ 청소년 배달대행 노동자 산재불인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상고심

2016/05/27 일바노조 청소년노동인권 강연

2016/04 ~ 10 경기도 특성화고 졸업생 사망사건 대책위원회 활동

2016/06 경기도 특성화고 졸업생 유족 면담 및 언론 대응

2017/07 뷔페형 외식업체 관계자 면담

2016/08/29 뷔페형 외식업체에 대한 고소 및 진정

2016/07 ~ 09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단 활동

2016/09 지하철 비정규직 사망재해 해결과 안전사회를 위한 시민대책위 진상조사보고서 작성 및 발표

공감은 그동안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전개해 왔습니다. 중고령인들이 가장 많이 선택하는 일자리가 바로 경비, 그 중에서도 아파트 경비입니다. 그러나 경비 노동자들은 무관심과 무시 속에서 노동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경비 노동자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고 목소리를 내기 위해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조차 힘듭니다.

공감은 직접 현장으로 들어가서 아파트 경비 노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하고 소송을 하고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개별 당사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쏟는 한편 동시에 구조적인 지점을 건드려 보다 많은 경비 노동자들에게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 같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결과가 적다 보니 지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감은 계속해서 경비 노동자들이 당당한 노동자로 인정 받고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아파트 경비 노동자 노동권 보장을 위한 각종 활동

- 2016/01 ~ 노원구 경비원 조직화 사업 (정기 경비원 모임, 교육, 상담)
- 2016/01 ~ 삼풍아파트 경비원 임금지급 청구소송 항소심, 상고심
- 2016/02 ~ 09 무인경비시스템 설치를 이유로 한 아파트 경비원 집단해고 대응 가처분
(공사금지 가처분 및 가처분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천막철거 등 가처분) 사건 대리
- 2016/02 ~ 08 입주자대표회의의 무인경비시스템 설치 결의 무효 확인 소송 진행
- 2016/03/15 서울시의회 주최 아파트 경비노동자 노동권 보장 관련 토론회 토론
- 2016/03 ~ 07 상생고용 가이드북 마련
- 2016/04 노원구 총선 예비후보자 간담회 및 경비원 입법 관련 총선 후보 공개 질의
- 2016/05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조례 (맑은 아파트 조례) 개정
- 2017/03/10 압구정 현대아파트 분신 노동자 유족을 대리한 위자료 청구소송 승소

세월호에서 돌아가신 정규직 교사들과 다르게 김초원?이지혜 선생님 두 분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순직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두 선생님은 정규직 교사와 동일하게 학생들을 가르쳤고 '담임'이라는 중요한 업무를 맡았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사명감을 갖고 학생들과 함께 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라고 해서 학생들을 덜 사랑하거나 교사로서의 사명감이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부는 두 선생님에 대해 계속 순직인정을 거부하며 죽어서까지도 차별하고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학여행을 떠나기 전 단원고등학교는 정규직 교사들은 재해 보험에, 학생들은 여행자 보험에 가입시켰습니다. 그러나 두 선생님은 예외였습니다. 두 선생님을 위한 보험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공감은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유족들을 대리하여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지속적으로 항의하고 경기도교육청과도 면담 등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해결을 하지 못한 상황에서 순직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을 대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별도로 두 분의 순직을 인정받기 위해 법률안을 만들어서 국회에서 발의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차별에 이의제기하다

- 2016/01 ~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대책위원회 활동
- 2016/02 세월호 기간제 교사 보험금 미지급 관련 질의서, 의견서 작성
- 2016/03 경기도 교육청 / 안산 교육청 면담
- 2016/07 ~ 세월호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불인정 처분 취소소송
- 2016/08 416 세월호 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마련

41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소송 승소!

42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수립 연구

43

계속되는 재난, 생명에 대한 위협에 맞서다

탈북자 인권의 사각지대에 다가가다

44



수명이 다한 노후원전은 위험하므로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폐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2015년 2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에 명시된 최신기술기준을 활용한 안전성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노후원전의 수명연장을 밀어붙였습니다. 이에 환경단체들은 ‘월성1호기 수명연장허가 무효 국민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2015년 4월 1일부터 약 한 달간 2,166명의 원고를 모집하였습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총 32명으로 구성된 ‘월성1호기 수명원장을 위한 운영변경허가처분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변호사들은 2015년 5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한 이후 2015년 10월 2일 첫 변론재판을 시작으로 지난 2017년 1월 4일까지 총 12번의 재판과 현장검증, 증인신문 과정을 통해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의 부당함을 주장하였습니다.

1심 법원은 2017년 2월 ① 월성 1호기 수명을 연장하는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적법한 심의·의결이 이뤄지지 않았음, ② 위원회 위원 중 2명이 위원 결격사유가 있는데도 운영변경 허가를 심의·의결하는 데 참여하였음, ③ 원자력안전법령에는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 과정에서 최신 기술기준을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데도 월성 1호기 계속운전을 위한 안전성 평가에 최신기술기준을 적용하지 않았음 등의 위법사유를 들어 월성 원전1호기의 수명연장허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수명연장허가 취소소송 승소!

2015/05/18 ~ 소장 접수 후 12차례 변론기일 진행

2016/03 원자력안전위원회 검증 실시

2017/02/07 판결선고

2017/02/07 월성 1호기 수명연장 무효확인 국민소송대리인단 기자회견

공익의
확대

공익법 일반

인권은 범세계적 이념으로 발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인권의 실현에는 보다 작은 단위에서의 구체적인 실천이 필요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인권의 제도적·규범적 실천을 위한 단위로서 '도시'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독일 뉘른베르크, 미국 워싱턴 등 세계 곳곳의 대표적인 도시들이 저마다 인권보장체제를 수립해온 것입니다. 서울시는 2012년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를 제정하고 일련의 인권행정을 펼쳐왔습니다. 2015년 12월, 서울시는 3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을 수립하고자 연구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공감의 이사인 한상희 교수를 책임자로 여러 연구자들과 공감 구성원이 결합한 9개월의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국제 인권도시들의 과거와 현재를 살펴보고 인권행정의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진행하였으며 전문가 집담회, 토론회, 포럼 등 다양한 형태의 연구 작업이 이어졌습니다. 여러 인권단체의 활동가들에게 자문의견을 구한 후 보고회를 통해 보고서 내용을 가다듬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8월 제출된 최종보고서에서는 서울시가 인권도시로서 가져가야 할 중심 가치로서 발전, 연대, 참여, 평화를 제시하는 가운데 기억의 도시, 공유의 도시, 향유의 도시가 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2017년까지 인권실태조사를 진행하며 인권위원회를 강화하고, 서울시민 인권현장이 지닌 권리선언적 성격을 강조하고 그 수범자로서 서울시장의 의무를 분명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까지 인권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인권위원회와 인권보호관은 독립적·실효적 기관으로 정립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는 지방분권체제를 지향하는 가운데 인권체제의 법적 기구화를 제안하였습니다. 이러한 학술적 연구가 향후 서울시의 구체적인 행정을 통해 발현되어 서울시가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나은 인권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비전수립 연구

공감은 2014. 4. 16. 세월호 참사에 대응하는 현장지원활동을 진행한 이래 재난, 생명안전의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416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416가족협의회와의 대정부, 대국회 활동 일부를 자문하고 외신기자간담회나 유럽 방문 활동을 지원했고, 다양한 공간에서 발표, 토론, 교육 등을 통해 참사의 진실을 알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과 관련해서는 피해자단체, 관련 시민사회단체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영국에서의 소송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영국변호사들과의 만남을 가졌고, 관련 영국기업 자문회사에 의견을 전달하고, 유엔인권메커니즘, 관련 영국기업의 투자자인 노르웨이연기금의 윤리위원회, 영국의 반부패기구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

감염병 격리의 요건, 절차, 격리대상자의 처우상의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의료계와 정부의 전문가 간담회를 진행하고, 국제기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의 관련 법제와 관행에 대한 비교연구를 통해 감염병 격리를 둘러싼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습니다.

계속되는 재난, 생명에 대한 위협에 맞서다

- 416 세월호 참사, 가습기살균제 피해, 메르스 격리 대응 활동

- 04/06 서울대 인권포럼 세월호 참사 2주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 "진실에 대한 권리" 발표
- 04/30 대한변협 생명안전법률지원번호사단 워크숍 "4·16 세월호 참사에 대한 법률지원단 활동과 평가" 교육
- 05/30 고대 공중보건의 역사 "세월호의 진실을 알 권리, 세월호를 기억할 권리" 강의
- 07/20 세월호특조위 세월호 참사 피해자 지원 실태조사 결과발표회 토론
- 09/18 가습기살균제 노르웨이연기금 윤리위원회 진정 제출
- 가습기살균제 영국 반부패법 고발장 제출
- 가습기살균제 유엔특별절차 추가진정 제출
- 11/14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교육-세월호와 합동신문
- 11/29 대한변호사협회,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실 공동주최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구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기획
- "감염병 격리와 인권" 발표

공감은 지난 수년간 영국과 호주에서 난민신청을 한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인정을 위하여 꾸준히 현지 법원에 전문가 의견을 제출해왔습니다. 2016년에는 직접 영국의 이민항소 법원에 전문가 증인으로 출석하여 탈북자 난민인정의 필요성을 법리적으로 제시했습니다. 그 외에도 국제난민판사협회와 북한대학원대학교 등의 주최한 국제회의에 참석하여 관련 학자와 실무자들에게 탈북자 난민지위 인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널리 알렸습니다.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탈북자들을 잠재적 간첩으로 간주되어 '한국판 관타나모', 탈북자 합동신문센터(현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 법적 절차보장 없이 장기간 구금되어 위법적인 형사절차의 대상이 되고, 광범위한 개인정보 제공을 강요받습니다. 공감은 그동안 이 시설 관련 법제와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배상소송, 인신구제청구 등을 진행해왔고, 2015년에는 유엔자유권위원회에서 장기구금, 이의제도의 부재, 변호인접근권의 배제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일조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합동신문의 대상이 된 탈북자들의 유엔자의적구금실무그룹 진정에 참여하였고, 관련 외신기자회견에서 인권의 관점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그동안의 관련 국내 연구와 판례를 종합하고 구동독국민이 구서독으로 이주하는 과정에 대한 비교법 연구를 통해 현행 탈북자 관련 구금, 조사제도가 과도한 공권력의 행사임을 제시하였습니다.

탈북자 인권의 사각지대에 다가가다

– 외국에서의 탈북자 난민지위 인정, 탈북자 합동신문구금 법제 및 관행 개선 활동

- 01/21 ~ 01/22 탈북난민 P 영국항소심 의견서 제출, 소송기록 검토, 담당변호사 면담, 재판기일 전문가증인 출석
- 06/11 국제난민판사협회-사법연수원 국제회의 '탈북여성, 아동의 국제적 보호' 토론
- 06/11 민변 탈북식당종업원 유엔자의적구금실무그룹 진정
- 07/07 집단탈북사건 외신기자회견 '탈북자 '보호' 절차 및 인신구제절차 관련 법과 관행의 문제점' 발표
- 12/08 북한대학원대학교 북한의 이동, 북한사람의 이주 국제회의 난민, 인권, 북한사람 세션 토론
- 11/29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교육-세월호와 합동신문
- 11/29 대한변호사협회, 오회중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실, 김성식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실,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실 공동주최 「인권의 측면에서 바라본 행정구금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심포지엄」 기획, "합동신문" 관련 발표 자문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프로보노지원센터 개소

46



2016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진행

47

공익법 교육·중개

프로보노는 '공익을 위하여(pro bono publico) 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사회적 약자를 위해 무료변론이나 자문을 해주는 활동 등 변호사 공익활동을 이르는 말로 쓰입니다. 공감은 설립때부터 변호사 공익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2016년 4월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에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공익실현을 위해 프로보노 활동을 하는 변호사와 공익인권단체를 중개 · 지원하고 공익변호사 양성을 목표로 하여 프로보노지원센터를 설립되었고,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가 초대 센터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회에는 법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사각지대에 머문 이들이 아직 많습니다. 그간 뜻 있는 변호사들이 인권 수호를 위해 큰 역할을 해왔지만, 모든 이들의 인권이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변호사들이 아직 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사회는 보다 많은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참여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공감은 프로보노지원센터와 함께 변호사 공익활동이 보다 보편화되고 인권친화적인 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에 미력하나마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산하 프로보노지원센터 개소

2016/04/28 공감 월례포럼 '우리는 착취를 반대합니다

- 알바, 조교 근로장학생 만국 청(소)년들의 진짜 노동이야기 _ 정준영(청년유니온) 외 4회

2016/01/20~22 예비법조인 대상 제9회 공감 인권법캠프

2016/02/15~25 로스쿨 동계 실무수습

2016/02/25 청소년 인권행사 '공익변호사를 꿈꾸는 청소년 모여라' 외 1회

2016/03~07 공감 23기 자원활동 인턴십 운영(15명)

2016/04/11 공익변호사 자립지원사업 지원 협약식(2인 지원)

2016/08/8~19 로스쿨 하계 실무수습

2016/07/22~23 공감 여름 인권법캠프

2016/09~2017/02 공감 24기 자원활동 인턴십 운영(11명)

2016/03~06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강의

2016/03~12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리걸클리닉 강의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은 전업 공익변호사로 활동해온 선배들의 이야기 속에서 예비법조인들이 공익변호사로서의 구체적인 활동모습과 전망을 그려보는 장입니다. 공감은 2011년 5월 첫 행사를 시작한 이래 매년 빠짐없이 개최하여 왔습니다. 특히 지난 2016년부터는 '공익변호사모임' 주최로 장을 넓혔고, "토크콘서트" 형식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즐겁게 나누는 장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간 라운드테이블이 서울에서만 진행되었다는 아쉬움이 있었기에 2016년에는 서울 이외 지역에서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습니다. 특히 부산지역에는 공익변호사와 협업을 예비하는 공익단체들이 있고 시민단체에서 전업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는 변호사도 존재합니다. 부산대 · 동아대에 두 개의 로스쿨이 있어 공익변호사에 대한 관심과 의지를 지닌 다수의 예비법조인들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2016년 4월 첫 라운드테이블을 부산대 로스쿨에서 개최하였고, 6월에 두 번째 라운드테이블을 서울시 NPO지원센터에서 개최하였습니다. 2차례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전업공익변호사와 변호사 공익활동, 변호사 공익활동의 이유, 공익변호사가 되기 위한 준비 등에 대해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2016 공익변호사 활성화를 위한 라운드테이블 진행

2016/03/15 공익변호사모임 회의 등 5회

2016/02/23 로펌 공익전담변호사 회의 등 6회

2016/04/27 공익변호사 양성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외 1회

2016/08/29~9/1 2016 2016 아시아 프로보노 포럼 참가 @인도네시아 발리

2016/09/07 외국법전문법률사무소협회와의 업무협약식

2016/11/07 로펌 프로보노 세미나 기획 및 참여

2016/11/28 대한법률구조공단-공익변호사모임 간담회

2016/12/02~03 제3회 공익변호사 한마당 행사

공감이 걸어온 길

2004

- 아름다운재단 내 공익변호사그룹 공감 활동 시작
- 제1회 공익단체에 대한 변호사 파견 사업 시작
- 이주노동자, 가정폭력 피해 결혼이주여성, 성매매피해 여성, 장애인을 위한 법률 지원

2005

- 시각장애인 지하철 추락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장애아동 보험가입 거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 국제결혼 중개 구조 실태 - 베트남, 필리핀 현지조사
- 노인학대 예방 매뉴얼 작업

2006

- 성·인종차별 국제결혼 광고대응을 위한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 미얀마 출신 민주화 활동가의 난민 자격 취득을 위한 행정소송
- 한국장애인인권상 수상, 제20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상 수상

2007

- 비닐하우스촌 거주민 실태조사 및 법률상담
-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연구, 토론, 공청회 발제 등 입법 활동
- 필리핀 카톨릭 추기경 수여 감사패 수상, 공익제보자와 함께 하는 모임 수여 감사패 수상

2008

- 스톡킹 피해 여군장교의 항명죄에 대한 변론/무죄 선고
- 국제심포지엄 '로스쿨과 공익인권법 : 전망과 모색' 개최
- 법조협회가 선정하는 제2회 사회봉사단체 우수단체 선정

2009

- 이주아동 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공청회 개최 및 법안 발의 등 입법 활동
- 지역주민의 반발로 노숙인 쉼터 설치 신고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 용상 화재 참사 유가족 및 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

2010

- 영화 '친구사이'의 동성애 표현을 이유로 한 청소년관람불가 판정취소 소송
- 표현의 자유를 위한 국제인권 네트워크 구성
- 일가재단 주최 '청년 일가상' 수상

2011

- 유엔난민인권규약의 국내 이행을 위한 난민법 제정
- 아동의 최상의 이익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
- 법조언론인 수여 '올해의 법조인상' 수상

2012

- 알바 청소년/요양 보호사의 부당한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소송 지원 및 입법활동
-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법 연구회' 구성 및 연구 활동
-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2012 대한민국 심의 관련 NGO 대응활동

2013

-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창립
- 필리핀 진출 한국 기업 인권 감시 실태 조사
- 공감 에세이집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출간

2014

- 제1회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사업 실시, 제1회 공익변호사 한마당 기획
- 세월호 참사 - 유가족 지원을 위한 변호사 파견, 사망한 민간 잠수사와 기간제 교사를 위한 법률 지원
- 아산 사회복재재단 '아산상-재능나눔부문' 수상

2015

- 사망한 압구정 아파트 경비원 사건의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아파트 경비원 인권 옹호 활동
- 정신병원 감금 피해자 대리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정신장애인 복지지원법 제정 활동
- 제19회 정일형·이태영 자유민주상 수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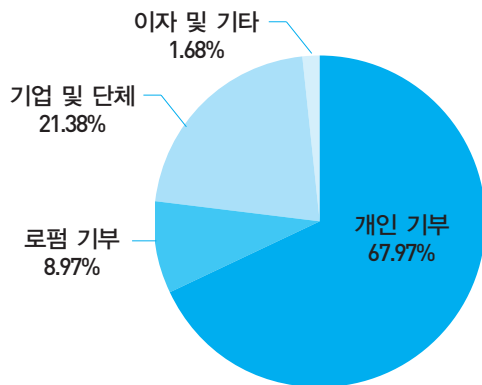
2016

- 정신병원 강제입원제도 헌법 위헌제정 신청 - 헌법불합치 결정
- 이주여성농업노동자 성폭력 실태 조사
-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무효 소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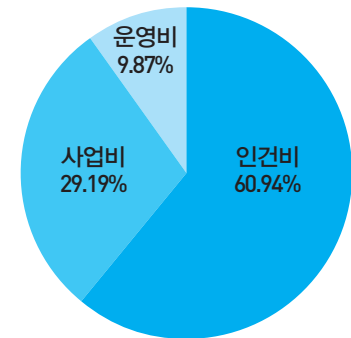
공감 살림살이



605,871,000 개인 기부
 79,920,000 로펌 기부
 190,582,000 기업 및 단체
 14,972,000 이자 및 기타
891,345,000 합계



491,552,000 인건비
 235,468,000 사업비
 79,604,000 운영비
806,624,000 합계



사업비	
교육 · 중개	19,855,000
공익변호사 자립지원	84,000,000
법률교육/지원	1,428,000
소송 지원	2,929,000
인권법캠프	18,652,000
월례포럼	3,055,000
연구조사	67,186,000
기부회원	37,208,000
홍보	1,155,000
소계	235,468,000

운영비	
복리후생비	18,043,000
세금과공과	18,228,000
지급수수료	9,978,000
건물관리비	7,920,000
지급임차료	3,995,000
사무실유지비	22,162,000
소계	79,604,000

참 고맙습니다

[illegible]

함께하는 이사회 사람들

공감은
4차산업혁명속에서도
인간다움을 지키는
빛나는 가치입니다.

홍진표 이사



공감에 공감해주시는
그대 정말 멋지세요~~♡♡♡
올해도 걸음 걸음
따뜻한 손잡고
함께 나아가요
변연식 이사



공감은 사람의 법을
찾아가는 길이다.
모두가 다니는 길,
그 길에서
공감은 세상을 밝힌다.

한상희 이사



힘이 없어도 같이 하는 사람이 있어서
희망과 용기가 생기게 하는 사회를 만
들기 위해 정열적으로 힘쓰는 공감의
일꾼들에게 진정한 격려와 응원을 하
기 위해 동참했습니다.

김영준 이사



모두가 공감하는
가장 투명한 재단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연선 감사



공감은 구석구석 어둠을 비추고
밝히는 촛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겠습니다.
이 빛이 꺼지지 않도록
등잔에 향유를 부어주시고
바람을 막아주시는 후원자님,
눈물겹게 고맙습니다.

전수안 이사장



약하고 소외된 이웃들에게
소중한 친구가 될수 있도록
공감은 더욱 노력하고
발전하겠습니다

강승수 이사



공감을 믿고 응원해 주시는 마음이
희망의 씨앗이 되어
더 열심히 활동할 힘을 줍니다.
늘 고맙습니다.
김유니스 이사



태평양을 건너
이 미륵사람이 공감을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데이빗, 워터스 이사



공감의 꿈은
우리 사회의 모든 방면에서
억울한 이들이
사라지는 것이겠지요.
불가능할 그 꿈을 이루세요!

신경숙 이사



一 共 一 空
一 感 一 減
함께 할수록
마음이 비워지고
그리 느낄수록
살이 가벼워집니다.

윤재운 이사



함께하는 사람들

구성원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염형국



긴 겨울의 끝에서
새 세상을 여는
봄을 맞이합니다.
김수영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윤지영



"계속해보겠습니다."
차혜령



나의 빈자리,
공감의 빈자리를
느낀 1년,
새롭게 2막을
시작하는 기분.
장서연



"이제부터 시작이다"
박영아



'인권, 자유와 평등을
향한 끝없는 여로'에서
나는 누구이고
우리는 무엇인지
다시 묻습니다.
황필규



결국, 봄.
안주영



"아픈 세상으로 가서 아프자"
- 황지우 '산경' 중에서
소라미



늘 같은 길,
처음 시작하는
마음으로
신옥미



공감과
아름다운 동행을
시작하는 한 해,
감사합니다.
김지림



아장아장에서
성큼성큼으로!
성혜경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2016 연간보고서

발행일
2017년 4월

발행인
전수안

발행처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원서동, 북촌창우극장 3층)
TEL 02-3675-7740 FAX 02-3675-7742
www.kpil.org

디자인
동방기획
TEL 02-2277-0365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희망을 전해 주세요.

공감은 삶의 현장에 있습니다.
장애인, 난민, 이주여성, 홈리스, 성소수자 등
세상 주변부에 선 사람들의 삶,
바로 그 자리에 뛰어가 법을 말하고
법을 바꾸고자 합니다.

공감은 희망을 그리는 길 위에 있습니다.

소외된 우리 이웃들이
잠시 잃었던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그 희망을 응원해주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에 희망을 전해 주세요.
작은 나눔이 우리 이웃에게 큰 힘이 됩니다.

[후원 계좌 안내]

하나은행 162-910015-36804
(예금주 : (재)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정기 후원신청]

- * 홈페이지 : www.kpil.org
(CMS 납부 신청이 가능합니다.)
- * 이 메 일 : gonggam@gmail.com

- *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은 지정기부금 단체입니다. 공감에 보내주시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근거하여 연말정산시 비용 인정 및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 기부금 영수증은 1년 동안의 기부액을 합산하여 이듬해 1월 초에 우편 발송되며, 별도 발행도 가능합니다.
- * 2014년 귀속 기부금 영수증부터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공감 기부회원께는 공감이 발행하는 연간보고서와 온라인 뉴스레터를 보내 드립니다.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지음

법의 새로운 사용법을 보여주는 『우리는 희망을 변론한다』. 이 책은 2004년도에 등장한 최초의 로펌 ‘공감’ 변호사들의 이야기를 현장의 생생한 에피소드와 함께 들려준다. 척박한 우리 사회 인권의 현주소를 생생하게 전하는 한편, 인권 사각지대를 만드는 법과 제도의 부조리에 대한 날카로운 고발도 담겨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뜨겁게 앓고 고군분투하는 공감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한 ‘희망의 기록’이다.

[인터넷 교보문고 제공]



주소 03058 서울시 종로구 창덕궁길 29-6 (원서동, 북촌창우극장 3층)

전화 02. 3675. 7740 팩스 02. 3675. 7742

이메일 gonggam@gmail.com

블로그 withgonggam.tistory.com

홈페이지 www.kpil.org